



주간통일정세 2009-23(2009.06.01~06.0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2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양음대 가극창작 지도(6/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의 러시아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의 “창조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새벽 보도
- 통신은 7일자 보도에서 김 위원장은 평양음악대학이 1958년 무대에 올렸던 ‘예브게니 오네긴’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다시 창조하고” 있는 것을 지도하고 “창조중에 있는 가극”을 관람했다고 소개, 이 행사에는 특히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당 중앙위 부장 자격으로 수행했으며 이외에 김기남 당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최익규도 수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통신은 이날 또 김 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군에 있는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해 새로 조성한 과수원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과수원 현대화 추진 상황과 과일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전언, 농장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비서와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박남기, 북한군 대장들인 현철해 리명수가 수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정일, 함남도 협동농장 현지지도(6/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주군의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김 위원장은 모내기를 마친 논과 감자밭을 둘러보고 “동해안에 위치한 동봉협동농장에서 높고 안전한 알곡 소출을 내기 위해서는 냉해가 심하고 해비침(채광)률이 낮은 동해안의 불리한 기상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해 그에 맞는 경작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언급
- 이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6/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2기 제2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한 제264군부대와 제604군부대의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공연은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 대장, 북한군 대장들인 김원홍, 현철해와 한동근 상장(우리의 중장)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간부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노동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박남기 등 당 중앙위 책임간부들이 함께 관람

● **김정남, 아버지가 정운 좋아해(6/7, 니혼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정남씨는 7일 방영된 일본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 막내동생 정운씨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그러나 자신의 망명설은 전면 부인
- 정남씨는 “정운씨가 후계자가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운씨가 후계자라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노(no)’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
- 그는 “정운씨가 아버지를 닮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동생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아버지는 동생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고 답변
- 니혼TV는 또 정남씨가 후계자 문제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결정 사항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北, 김정일 3남 후계자 지명 중국에 통보(6/3, 아사히 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3남인 김정운(25)을 지명했음을 북한 노동당 간부가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
- 신문은 노동당 간부와 관계가 깊은 북·중 관계 소식통과 양국을 왕래하며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김정운이 올들어 처음으로 당과 군의 인사권을 쥐 당조직지도부장에 취임했다고 밝힘. 신문에 따르면 이 노동당 간부는 금년 초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 간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두로 전달

● **국정원, 北 김정운 후계구도 공식 확인(6/2, 연합)**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차 핵실험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2일 알려짐.
-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전문을 해외 주재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 북한은 지난 1월 8일 25회 생일을 맞은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비밀리에 하달한데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 직후 노동당, 인민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부처, 해외 공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운’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짐.



- **北, 핵실험직후 당·군·정에 ‘후계자 김정운’ 통보(6/1, 연합)**
 - 북한이 제2차 핵실험(5.25) 직후인 5월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운(25)이 후계자로 선정된 사실을 노동당과 인민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부처들에 통보함으로써 정운의 후계자 선정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짐.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1일 “북한 당국이 그동안 노동당과 군부 고위층을 통해 정운의 후계자 선정 사실을 중간급 단위에 비밀리에 전파해 왔으나 핵실험 직후 노동당과 인민군에는 물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등 행정기관들에도 공식 통보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월8일 정운의 25회 생일에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비밀리에 하달했으며, 이후 외병중의 김 위원장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및 국방위원을 중심으로 국방위원회가 후계구도 구축을 은밀하게 추진
 - 북한 당국은 또 해외 주재공관들에도 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공식 통보했으나 외부에 누설하지는 말 것을 강력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외국 단체 관계자는 “북한측 인사들로부터 김정운이 지난 3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 216호 선거구에서 ‘김정’이라는 이름으로 대의원에 선출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등 김정운이 대의원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

나. 정치 관련

- **北단체, 서해 군사도발설은 궤변(6/6,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6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 무력충돌의 책임을 사전에 북측에 전가하기 위해 서해상에서의 북의 ‘군사적 도발설’을 유포하고 있다며 “도발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측은 “북이 서해상에서 무력도발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망발”에 이어 “전투함정들을 연일 우리 측 영해에 불법침입시키고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강행해 나갔다”며 이로 인해 “서해상에서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
 - 대변인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설은 저들의 전쟁책동을 정당화하고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의 책임을 우리에게 미리 전가하며 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끓어번지는 남조선 인민들의 이목을 판데로 돌려보려는 어리석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난



- 노동신문은 이날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자주권 수호의 근본 담보’라는 다른 논설을 통해선 북한에서 “자위적 국방력은 곧 자주권이요 생존권이며 사회주의 수호의 근본 담보”라며 “우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데 대처하여 자위적 국방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도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낡은 시대의 군사적 대결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 **김정일 요즘 최대 화두, 상승(上昇) 또 상승하자(6/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상승하자!’는 제목의 정론(긴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불꽃놀이 때 “우리 조국은 자주 강국으로 높이 올라섰다.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에게 내러갈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상승해야 한다. 상승 또 상승만이 우리 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담보한다. 상승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말을 받아 “광명성 2호가 날아오르고 (중략) 지하 핵실험의 뇌성이 메아리쳐 간 장엄한 현실 (중략) 강성대국의 영마루(산꼭대기)를 향해 기수를 쳐든 영웅 조선의 상승의 기상이다”라며 “상승 또 상승하자”고 언급

● **北, 핵실험 자축 군중대회 잇따라 개최(6/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삼남 정운을 선정한 사실을 제2차 핵실험(5.25) 직후 당과 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전역에서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군중대회가 잇따라 개최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은 2일 송림시와 희천시, 단천시, 구성시, 덕천시, 회령시, 김정숙군, 삼지연군, 보천군, 북창군, 전천군, 어랑군, 화대군, 은률군, 숙천군, 곡산군, 재령군, 함주군, 영광군, 연변군 등에서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보도, 이들 군중대회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등의 책임간부들과 군인,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참가.
- 북한은 5월 26일 평양시 군중대회에 이어 30일에는 평안남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도단위에서 핵실험 성공 축하 군중대회를 개최

● **北, 美대북방송 강화도 핵억제력 강화 구실(6/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방송에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통신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년도 예산안에서 대외 방송지출을 훨씬 늘렸고 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반공화국 선전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들에 돌렸다”며 “이것은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현했으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통신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거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을 대상으로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 부르주아 생활양식에 대한 선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방송 내용을 비난하고, 이들 방송에 대한 자금지원과 방송시간을 늘려 “우리를 어찌보려는 미국의 그릇된 책동은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

● **조선신보, 정전협정으로 자제했던 것 검토(5/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제재와 포위환(環), 미국 주도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국제 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전협정 체결 이래 수십년간 자제해 왔던 행동조치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30일 주장
-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지 정전협정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한다”며 신문은 특히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거나 선전용으로 써먹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향후 사태발전에 대비해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

다. 경제 관련

● **춘궁기 영양실조 어린이 증가(6/3, 연합)**

- 보릿고개를 맞은 북한의 탁아소와 병원에서 영양실조를 앓는 어린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고팔란 발라고팔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가 밝힘.
- 평양에 있는 발라고팔 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춘궁기에 처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정도가 중증부터 경증까지 임상적으로 다양하다”며 “현재 악화된 식량 사정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에서 영양실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유엔 기관들의 진단”이라고 언급
- 그는 유니세프가 오는 10월 북한 전역에서 주민 영양실태조사를 벌이기 위해 “곧 북한 정부와 주민영양실태를 포함하여 종합지표 조사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

● **北군부, 경제 장악 확대, 무연탄 수출 주도(6/3, 연합)**

- 북한 군부가 석탄 수출권을 내각으로부터 넘겨받는 등 북한 내 알짜 경제 부문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짐. 3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



- 한 내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출권이 올 들어 내각 소속 무역회사에서 군부 소속 무역회사로 이관
- 북한의 무연탄은 연간 수출 물량이 200만~300만t 규모로 연간 2억 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대표적 수출 품목으로 그동안 군과 노동당, 내각이 고르게 무연탄 수출 쿼터를 나눠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북한 최대 화력발전소인 북창 화력발전소의 통제·관리권도 올 들어 군부로 넘어갔음.
 - 1968년 소련의 원조로 건설돼 시설용량 200만kW 규모인 이 발전소는 내각 소속의 전력공업성이 직할 관리해왔으나 올 초 전력공업성 간부가 ‘뒷돈을 받고 국가기관에 공급될 전력을 빼돌려 외자기업 등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숙청된 이후 실질적인 관리, 통제권을 군부가 장악했다고 함.

● 모내기 질높이기 총력(5/27,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5월 27일 ‘모내기의 질 보장에 힘을 넣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내기의 속도와 함께 질을 높이는 것은 논벼 생산을 늘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
- 신문은 “모내기의 선행공정”이 중요하며 “수평이 잘 보장된 논, 흙양금이 다 가라앉은 논에 모를 낼 수 있게” 씨레치기(씨레질)를 잘 할 것을 주문하고, 튼튼한 벼모를 내기 위해 모판장에 자주 들고 모판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

● 北무역특구 나선 장마당, 2천명 운집(6/2,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2일 “현지에서 영접 나온 당국자들에게 ‘밖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난리인데 어려운 가운데 왔다’고 말을 건네자 이들은 웃으면서 덩덤히 대하더라”고 전언
- 5월 27-29일 방북한 이 단체 관계자는 “16만명 인구의 나진 시내 장마당은 1천500명~2천명정도 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며 “건축자재, 식료품, 야채, 과일, 옷, 이불, 신발 등이 죽 늘어선 매대들에 진열돼 있고 나도 속옷 같은 것을 사느라 흥정하며 1시간 반을 시장에서 돌아 다녔는데 정말 바글바글 했다”고 현지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설명
- 중국에서 40~50위안하는 이불은 나진에서 30위안으로 더 싼고 싱싱한 털게 3.3kg에 150위안으로 kg당 우리돈 6,7천원 밖에 안돼 180위안어치를 사 7, 8명이 실컷 먹었다는 것
- 그는 “나진 시장은 평양에서 가장 큰 통일거리 장마당보다 커 보였다”며 “주로 중국돈과 북한돈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달러로도 조심스레 거래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했다”고 언급
- 장마당이 열리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로, 신의주에서 만든



가방도 팔리고 있었는데 품질이 괜찮았고 올해는 특히 명태가 풍어라고 현지인들이 말했다고 전하고 “시장 상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지만 중국을 통해 반입된 한국산도 라벨을 떼 채 거래된다고 한다”고 소개

- 또 나선 지역은 무역특별구이기 때문인지 미주 또는 호주 교포들이 영주권에 해당하는 ‘거주증’을 받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으며, 최근 러시아의 나선 지역 부두 투자를 반영한 듯 “나선시 남산호텔에서 두서너 그룹의 러시아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오래전부터 현지에서 장사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고 이 단체 관계자는 설명
- 또 중국 옌지에서 밀가루와 쌀을 사서 북한에 들어가려 했으나 밀가루는 관세가 30~40%나 붙고 쌀은 아예 반출 금지 품목이어서 결국 강냉이 국수 400박스만 사서 들어갔다면서 “비료도 110%의 관세가 붙어 있어 구매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소개, 2007년 11월 시작된 중국의 대북 곡물반출 금지는 옥수수의 경우 2008년 연말부터 풀렸고 밀가루는 지난 2월말부터 풀렸으나 쌀은 여전히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
- 그는 “이같은 대북 곡물반출 규제 탓에 이전에는 중국에서 북한의 회령같은 곳으로 물품을 싣고 들어가는 차량이 한번 통관시 10여대였는데 이제는 1, 2대 수준”이라며 “관세가 많이 붙어 이윤도 안 남고 북·중 양쪽 세관이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데다 북한과 거래하면서 돈도 자주 떼이고 해서 지금은 조선족 장사꾼들도 북한을 많이 드나들지 않는다”고 전언

● 北, 中 브라운관TV 수입 중단(6/1, 연합)

- 1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5월부터 중국에서 반입되는 브라운관 TV와 컴퓨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뒤 LCD TV와 컴퓨터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 그동안 북한은 중국을 통해 중고품을 포함, 연간 2만-3만대의 TV를 수입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여왔음.
- 한 대북 무역상은 “핵 실험을 전후해 북한의 보위부가 중심이 돼 외부 문물 유입을 적극 통제하고 있다”며 “고위층들만 구입할 수 있는 LCD는 허용하면서 브라운관 TV와 컴퓨터 수입을 중단시킨 것은 중산층 이하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추측
- 브라운관 생산 업체인 대동강 TV가 최근 중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이 투자가의 요구에 따라 북한 내 독점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라. 군사 관련

● 北해군절 맞아 연평해전 거론(6/5, 조선중앙방송)

-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중앙방송은 5일 ‘무적필승의 해군무력으로 키워주시어’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북한의 ‘해군절’을 맞아 “우리 해군력은 불패”라고 강조
- 방송은 특히 연평해전을 거론, “서해 해상전투는 우리 영해를 단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하는 원수들에게 어떤 무자비한 징벌이 가해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단호한 선언이었다”고 주장

● 북한군 고위간부, NLL북방 해안초소 순시(6/5, 연합)

- 북한 인민무력부 고위간부로 추정되는 한 인사가 5월 말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등산곳에 있는 북한군 해안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인민무력부 고위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5월 말 NLL 북방에 있는 북한 해안 관측소(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당국은 이 간부의 방문 이후 북한의 해안초소와 경비정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北경비정 51분간 서해 NLL 침범(6/4, 연합)

- 북한 경비정 1척이 4일 오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통신에 따라 퇴각했다고 합참이 밝힘.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4일 오후 2시47분께 연평도 서방 7.5마일 근해 NLL을 0.9마일(1.6km) 가량 침범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의 두 차례에 걸친 경고통신에 따라 51분 만인 오후 3시38분께 복상,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지난 2~3월에 이어 3번째며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임.

● 北, ICBM급 미사일 3~4기 제작(6/2, 연합)

- 북한이 2009년 말까지 3~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또는 로켓을 제작한 것으로 1일 알려짐. 이에 따라 북한은 5월 발사된 장거리 로켓과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겨진 미사일을 제외하고도 1~2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더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최근 서해 일대 해군에 실탄 및 포탄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축할 것을 지시하고 이례적인 기습 상륙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한 도발 준비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서해 중북부 7월까지 ‘항해금지령’(6/1, 연합)

- 북한이 오는 7월 말까지 서해안 중·북부 해역에 광범위한 항해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5월 31일 알려짐.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황해도와 평안도 앞바다 등 서해 중·북부의 광범위한 해역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

-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島)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숫자가 5월 28일 이후 280여 척에서 120여 척으로 갑자기 줄어든 것도 북한의 이런 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

마. 사회·문화 관련

● 북TV, 축구 이란전 생중계(6/6, 조선중앙TV)

● 北, AI예방 철새 이동경로도 작성(6/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생물분원 동물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도를 새로 작성해 전산화까지 마쳤다고 우리민족끼리가 6일 밝힘. 매체는 북한이 “지형학적으로 동아시아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요 경로중 하나”라며 “전염성 병원체를 나르는 중요한 매개물의 하나인 철새들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나라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언급

● 北, 아이들에게도 적과 싸울 각오 촉구(6/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조선소년단 창립 63돌을 맞아 ‘소년단원들은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이다’라는 제목의 창립 기념사설에서 소년단 조직들에서 “학생들의 심리와 준비 정도”에 맞게 ‘선군사상’과 애국심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 신문은 소년단원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 주고, 항일아동단원들의 투쟁이야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치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 원수들이 덤벼든다면 언제든지 맞서 싸울 굳은 각오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광명성2호’ 발사 등 “조국의 미래와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년단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품성은 “장군님(김정일)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이며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 아래 “누구나 컴퓨터의 능수가 되고 20, 30대에 과학자, 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언급

● 北, 지구환경보호 사업 적극 추진(6/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단합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문제들 중의 하나가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며 “조선



은 ‘세계환경의 날’을 맞으며 기후변화, 환경보호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국가적,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적극 벌이고” 있고 “국제적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

● **北, 처음으로 장기 환경정책계획 수립(6/4, 조선신보)**

- 북한 환경보호연구소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장기적인 환경정책 전망계획을 내년까지 작성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연구소는 계획 작성을 위해 환경영향의 평가 방법과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렇게 새로 완성한 환경영향 평가방법에 준하여 전반적인 환경실태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안보리 대북 결의안 내주 초 채택될 듯(6/6,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의 결의안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 당초 5일 회의에서 결의안에 최종 합의를 본 뒤 빠르면 주말께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던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이날 중국측이 본국과의 협의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회의 자체를 갖지 못했음.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은 주말 주요국 접촉을 통해 가닥을 잡은 뒤 내주 초께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에 여기자 석방촉구 서한 발송(6/8, ABC방송)**

- 클린턴 장관은 ABC방송의 대담프로그램인 ‘디스 위크’에 출연,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서한을 보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취해왔다”며 서한전달 사실을 시인, 클린턴 장관은 서한에서 여기자 2명이 국경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대신 사과하며, 석방을 호소했다고 ABC방송은 보도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며 이를 위한 절차가 있다”면서 “분명히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그들의 최근 지원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할 것”이라고 답변



- **오바마, 北 매우 도발적, 강경대응 시사(6/7, 연합)**
 - 프랑스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 그는 “두 나라(북한과 이란)를 구별하고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지난 수개월간 행동은 엄청나게(extraordinarily) 도발적”이라고 언급
 - 그는 “그들(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대륙간(발사) 능력이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우리는 도발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

- **美, 北 여기자 재판 계속 진행 중(6/5,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5일 북한이 억류한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없는 상태라고 밝힘. 크롤리 차관보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이 여기자들에게 북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진행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언급, 그는 여기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스웨덴 대사가 월요일(1일)에 그들을 만났는데 억류 상태를 감안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 앨 고어 전 부통령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이들 여기자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답변
 - 크롤리 차관보는 또 “과거 은행 분야에서 취한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분명히 끈 적이 있다”면서 “북한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임. 하지만 그는 북한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며 금융 제재 방안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

- **北, 도발대신 협상 복귀해야(6/3, 연합)**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권종락 외교차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더 위험한 추가 도발을 하는 대신 비핵화를 향한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 또 대북 제재와 관련, “우리는 여러 옵션을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한 뒤 “장기적인 전략이나 향후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

- **보즈워스, 北, 대화 유용성 깨달아야(6/3,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일 “북한이 (대화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북한이 먼저 대화의 유용성을 깨닫는 것이 대화가 효과적일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이라고 언급

- 보즈위스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처음부터 북한과 대화를 하려 했다”며 북한의 도발행위를 은연중 비판

● **美, 北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중단해야(6/1, 미국무부 대변인)**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떠한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도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긴장만 가열시킬 뿐”이라며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의 하나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호전적 발언과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
-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을 석방하는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선적인 관심사라면서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가 이날 이들을 개별 접견했다고 밝힘.

● **백악관, 北 핵확산이 최대우려(6/1, 백악관 대변인)**

- 미국 백악관은 1일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국가들에 인도하는 확산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핵확산 문제에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답변
- 그는 북한의 최근 행위와 관련, “그들은 준수하기로 합의한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하고 있다”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중, 대북정책 대폭 조정 불가(6/6, 평황(鳳凰)TV)**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대북정책을 대폭 조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을 미국에 밝혔음. 홍콩 위성방송인 평황(鳳凰)TV는 6일 양제츠 부장이 5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이에 앞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의 대북정책은 명확하며 모두가 알고 있다”고 답변 친 대변인은 북한을 겨냥해 “중국은 각방이 대국적 견지에서 냉정과 자제심을 유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언행을 방지하기를 호소한다”고 언급



- **中, 북한 ‘배은망덕’, 반감 확산(6/3, 환구시보)**
 - 북한의 지하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이 서로 강한 어조로 비난, 특히, 북한 외무성이 5월 29일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에 참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한 이후 양상은 더 격화
 - 환구시보는 3일 자 사설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말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 사설은 “중국의 수십만 지원군이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의 북한이 있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협의를 무시해가며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도 ‘피로 뭉친 우의(友誼)’를 언급할 수 있느냐” “핵실험은 양국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
 - 또한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양광례 국방부장까지 북핵에 대한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5월 1일에는 천즈리 전인대 부위원장(국회 부의장·부총리급)의 방북도 취소

- **中, 대북교류 잠정 중단(6/1, 연합)**
 - 중국이 북한의 2차핵실험과 강경일변도 정책에 썩기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베이징 당국은 당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왕자루이(王家瑞)공산당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백지화했다고 소식통들이 전언

라. 북·러 관계

- **메드베데프, 對北 경제제재 지지 시사(6/3, CNBC 방송)**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3일 크렘린궁이 발표한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과의 인터뷰 전문에서 “우리는 경제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거나 현 사태를 비난하는 새롭고 진지한 결의를 수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기된 제안들을 지지한다”고 언급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지만 최근 사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핵실험과 이후 로켓 발사는 국제안보를 저해하는 조치들”이라면서 “핵클럽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

- **유엔주재 러 대사, 북한 고립 안돼(6/2, 연합)**
 -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마련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강력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북한을 고립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 러시아 정부 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정은 강력해야 한다”고 언급, 그러나 그는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장래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공고히 하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

3. 대남정세

● 남북 개성실무회담 합의(6/5, 연합)

- 남북이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갖기로 합의, 이번 2차 회동은 5일 오전 북측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보내온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의한 것에 정부가 동의함에 따라 성사

<남북 당국간 개성실무회담 추진 관련 주요일지>

- ▲4.16 = 북, 개성공단 사업 관련 중대조치 전달 이유로 당국간 접촉 제의
- ▲4.21 = 남북, 개성공단 사업 관련 당국간 접촉
- ▲4.24 = 玄통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
- ▲5. 4 = 북, 남측에 6일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접촉 제의
- ▲5. 5 = 정부, 북에 ‘6일 접촉’ 불가 통보
- ▲5. 8 = 정부, 북에 15일 오전 10시 개성실무회담 개최 역제의
- ▲5. 9 = 北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남북대화 거부 시사
북, 남측에 12일 회담 개최 수정 제의
- ▲5.11 = 정부, 북에 15일 회담 개최.유 씨 문제 의제 포함 의사 전달
- ▲5.12 = 오전 남측 관계자 3명 개성공단 방문
남북, 개성공단서 사전 실무접촉..북,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간부 호출
- ▲5.13 = 남측 관계자, 북에 실무접촉 제의-북 거부
- ▲5.14 = 정부, 북에 회담 대표자 명단 전달-북 접수 거부
- ▲5.15 = 정부, 북에 18일 오전 10시 개성실무회담 개최 제의
북,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 계약 무효’ 통보, 남측 제의 사실상 거부
- ▲5.19 = 정부, 북에 조속한 회담 개최 제의
- ▲6. 5 = 북, 남측에 11일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접촉 제의
정부, 오후 북측 제의에 동의 의사 전달

● 억류직원 평양 압송 가능성(6/2, 연합)

- 북한 당국이 개성에 억류 중이었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가 평양으로 압송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정보 당국 핵



심관계자는 2일 “일부 언론에 유 씨의 평양 압송설이 보도됐는데 개성에서 어디인가로 옮긴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힘. 그는 “이 직원이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인데, 평양으로 갔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설명

- 이와 관련,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씨 신변과 관련하여서는 직접 확인을 못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나 개성 기업을 통해 간접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유씨 신변에는 이상이 없고 개성 인근 지역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는 간접적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평양으로) 압송됐다는 것은 현재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클린턴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6/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북한의 지난달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의 ‘디스 워크’에 나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며 이를 위한 절차가 있다”면서 “분명히 우리는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 최근 증거들을 찾아보려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테러지원활동을 벌인 증거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선 테러지원 재지정 검토가 시작단계라며 “우리는 방금 이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함. 그는 또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보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그들의 행동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고 강조함.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자금통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북한이 핵물질을 다른 곳으로 선박을 통해 운반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이를 저지하고 방지하고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의미있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 호전적인 행위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유엔에서 추가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북한에 대해 무기금수 등의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이어 북한의 선박을 이용한 무기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中, ‘균형있는’ 대북 결의안 촉구(6/7)

- 중국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적절하고 균형잡힌’ 유엔 결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7일 일본 외무성 관



계자가 밝힘. 외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 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도쿄에서 열린 비공개 일·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에게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절하고 균형잡힌 결의안에 동의한다”고 말함.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강경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함.

● 오바마 “北 매우 도발적”..정책수정 시사(6/7)

- 프랑스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이란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힘. 그는 “두 나라(북한과 이란)를 구별하고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지난 수개월간 행동은 엄청나게(extraordinarily) 도발적”이라고 말함.
- 그는 “그들(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대륙간 (발사) 능력이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우리는 도발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함.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이 문제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매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함. 그는 “북한이 끊임없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그런 뒤에 우리가 그들을 보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을 단순히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함. 그는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내가 선호하는 것은 항상 외교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외교는 상대방의 진지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보지 못했다”고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냄. 그는 “우리는 동맹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6자회담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매우 명확한 성명을 내고 결의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이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일치되게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지적함. 그는 “그들(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들이 얼마나 안정을 해치는지는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고 덧붙임.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면서 그럴 경우 다른 중동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핵개발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도 회견에서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이란



에 말했다”라면서 “이란은 민수용 핵에너지를 개발할 권리가 있지만 군사용 핵능력은 이와는 다른 문제”라고 밝힘. 그는 “그들의 핵 개발 목적이 평화적이라면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란 지도자의 터무니없는 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안보리, 선박검사 강화 원칙합의”(6/6)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협상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인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의무화 등을 담은 수정안을 대사급에서 채택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6일 전함. 통신에 따르면 수정안은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는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한편 금융 제재의 경우 추가 조치도 포함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주장을 반영한 강경한 내용임.
- 7개국은 4일 밤(뉴욕 시간) 수정안을 작성, 본국 정부에 보냄. 그러나 중국이 금융 제재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7개국은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안보리에 결의안을 정식 제출할 것으로 보임. 수정안은 총 35개 항으로 돼 있으며, 초점인 제재 강화 및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결의 1718호의 ‘이행 철저’를 요구하고 있음.
- 또 각국의 영해 내에서 핵, 미사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물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검사를 의무화했으며, 공해상에서도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조건으로 검사할 권한을 부여함. 공항에서의 검사도 의무화함. 이와 함께 전차 등 대형 무기에 한정했던 금수조치를 전 무기로 확대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경화기 수출은 예외로 함. 금융제재의 경우 국제금융기관 등에 인도적 목적이외의 지원 및 용자를 시행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이 추진한 북한 은행과의 거래 금지 등은 결의안에 직접 담지 않았으나 핵, 미사일 개발에 관계가 있는 개인·단체의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확대하고 가맹국에도 금융제재를 강화하도록 요구함.
- 미국과 중국 간 쟁점이 돼 왔던 유엔헌장 7장의 명기와 관련해서는 비군사적인 경제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7장41조’에 한정된 안보리결의 1718호와 동일한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함.

● “美, 對北 독자 금융제재 검토”(6/6)

- 크롤리 차관보는 또 “과거 은행 분야에서 취한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분명히 끈 적이 있다”면서 “북한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임. 하지만 그는 북한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며 금융 제재 방안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함.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래를 위한 일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함.

- 크롤리 차관보는 대북 금융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은 최근 핵 실험과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호전적인 발언들 때문에 스스로 고립시켜왔는데 그들이 계속 고립된 상태로 남겠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말해 대북제재 여부는 북한의 앞으로 태도에 달렸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다고 북한 회담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크롤리 차관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종전에 북한이 회담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많은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힘. 그는 “북한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국제사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여러가지 행동을 취해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불량행위에 보상할 의사는 없지만 북한이 협상과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북한에 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함.
- 이와 함께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의 생활상이 남한은 물론 나머지 세계와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러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결국은 알려질 것”이라며 “그런데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덧붙임.

● 美 “中과 북핵협의 생산적”(6/5)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 분야의 고위 인사들과 북핵 문제를 협의한 뒤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을 떠나기에 앞서 서우두(首都)공항에서 성명을 내고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동아시아 안보와 미·중 관계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함.
-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성명을 대신 읽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이클 해머 대변인도 성명 발표에 앞서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고 평가함.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뒤 양제츠 외교부장과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잇따라 만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 측 인사들과 두루 만나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듣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함. 그는 또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으며 중국 역시 큰 틀에서 별다른 이견을 표시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양측은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금융제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관측됨.

-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양제츠 부장과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한반도의 정세 등 공동으로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외교부는 “양 부장이 중·미 관계의 현재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민감한 문제를 잘 해결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는 내용은 상세히 전함. 관영 신화통신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다이빙귀 국무위원과도 1시간가량 회담했으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후 주석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오바마 정부, 北핵정책 선택기로” <키신저>(6/5)

-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시험재개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긴 했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협상절차를 갑자기 반전시켰다고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5일 말함. 키신저 전 장관은 이 날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고문에서 북한 핵문제는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2가지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우선 북핵문제는 미국으로서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강대국으로 재부상하는 러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 등과 관련되는 문제이자 테러단체 등에 대한 핵확산 위협과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지적함.
- 키신저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하고 군사행동을 위협해도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유있고 느긋한 방식으로 다뤄옴. 한때 미국과 북한의 양자 협상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는 주로 학계의 비실용적인 논쟁이었음. 두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추진됐지만 결국 별수없는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음. 키신저 자신은 평양 당국과의 협상에 찬성해 공식 대화채널에서 벗어나 한국관리들과 함께 투 트랙 대화에 더러 참여했지만 북한은 반복해서 이전의 모든 합의를 뒤엎음.
- 한국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제거였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거침없이 커짐. 이에 따라 협상은 평양당국이 핵 프로그램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기정사실화해주는 위협을 떠안게 됨.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차례 주었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평양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뛰어난 학자이자 온건한 외교관인 스티븐 보즈워스가 협상 책임자로 임명됐지만 이런 미국의 제안들은 사납게 거절당함.



-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공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북한 핵프로그램이 되돌릴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핵증강과 국경밖으로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찾거나 ▲한국을 비롯한 인근국,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압력을 최대화함으로써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키도록 하는 방법의 두가지 선택에 직면함.

● 고르비 “군사적 해법 北 상황악화 초래”(6/5)

-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은 현재의 북핵사태 해법으로 군사적 압박을 비롯한 대북 강경노선의 채택을 경계하면서, 국제사회는 6자회담 복원 등 정치·외교적 대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고르바초프는 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고문을 통해 최근 북핵 상황 악화의 원인·배경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다양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야 하다”고 밝힘.
- 그러면서 그 목표는 북한과의 정치적·외교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며, 특히 6자회담의 복원이라고 강조함.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연쇄 미사일 발사실험에 맞서 군사적 대응노선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고르바초프는 주장함. 군사적 강경 노선으로의 선회 목소리는 일본에서 분출하기 시작함.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내 재무장론자들의 입지를 넓히는 구실을 하고 있음. 윌러스그렉스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일본의 적(適) 기지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함. 전후 일본에서 금기시되던 핵 무장론이 제기되기까지 하고 있음.
- 고르바초프는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이는 오히려 북한을 더욱 무모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이나고 자문하면서 “북한은 그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강력한 대북제재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함.
- 첫째 북한 주민들을 핵문제의 볼모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둘째 핵무장 국가의 붕괴는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인으로 들음. 고르바초프는 “문제를 풀 열쇠는 정치적 해법에서 찾아야 하며,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갖고 있고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를 가진 6자회담 국가들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함. 고르바초프는 “중국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태도로 계속 갈 경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함.
- 또 중국은 ‘도대체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 있느냐, 핵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하는게 아니냐’라고 북한에 따질 수 있다고 고르바초프는 진단함.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 발표, 2차 핵실험에 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준비,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정보감시태세 ‘워치콘 격상’ 등 한반도의 움직임에 거론하며 고르바초프는 “냉전 시대의 복수식 대응은 상황을 급변시키고 예기치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함. 고르바초프는 “정치는 문제를 위협으로, 위협을 군사적 충돌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역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함.

● 한·미, ‘북핵-금융제재’ 다각 협의(6/4)

- 방한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현인택 통일장관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양국 공조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특히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수행중인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이날 별도로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만나 국제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금세탁과 위조지폐 방지 등의 문제를 논의함.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해야만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협력하여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하고 나서 다시 협상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미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한이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앞서 현인택 통일장관과 조찬 회동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운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후계문제가 최근 북한의 대외 강경 조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 레비 미 재무차관은 이날 스타인버그 부장관과는 별도로 허 차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해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위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허 차관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레비 차관이 전 세계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있어 자금세탁이 사라지도록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우리 또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자금세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각종 금융 관련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함. 레비 차관은 국제금융정보 전문가로 2005년 9월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BDA(방코 델타아시아)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자금 2천



500만달러를 동결하는 등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주도한 인물임. 이에 따라 레비 차관이 이날 자금 세탁에 대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에 협력하도록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자차원은 물론 향후 양자차원의 대북 금융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전 세계 주요국기들이 동참해 금융 정보를 공유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자금 세탁 등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함.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BDA 사태가 한창 진행중이던 2006년 1월 방한, 국정원과 재경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폐 제조·유통과 관련해 협의한 바 있음.
- 특히 지난해 11월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속칭 ‘슈퍼노트’ 9천 904매를 밀반입한 일당이 부산에서 구속되는 등 한국 내에서도 위조달러 문제가 현안이 돼있는 상황임. 정부 소식통은 “금융제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담겨있다”면서 “안보리 논의결과를 본 뒤 결의에 포함된 것과 달리 개별국가가 양자적으로 또는 안보리 밖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한·미 양국간 이뤄지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5일 중국으로 출국하며 그동안 진행된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측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결의와 금융제재 추진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 <북핵 6자회담 유용성 변하나>(6/4)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회담의 틀과 유용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해 2003년 8월 처음 시작된 6자회담이 2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생명력을 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음.
-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있음.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고위 인사간 3일 연쇄회동 직후 브리핑에 나선 외교부 당국자가 “6자회담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모였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힘.
- 이 당국자는 나아가 “북한이 6자회담으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나머지 5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현상황의 타개와 북한의 복귀를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힘. 다만 북한의 강경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6자회담



에 더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공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미 양자 접촉을 포함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둘 것”이라고 말함. 대화와 협상의 노력은 계속하되 굳이 ‘6자’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북핵 다자회담을 구상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임.
-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함. 6자회담이 난항에 부딪힐 때마다 나오는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5개국의 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이 맞물릴 경우 실효성을 갖지 않겠느냐는 분석임.
- 심지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았던 중국마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비롯한 대북 정책의 기초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하지만 고위 외교소식통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자회담 논의는 예전부터 6자회담 재개 방안의 하나로 계속해서 거론됐던 것으로, 한·미간 공감대가 조성돼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인데, 5자회담이 가능하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내다봄. 결국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의 존재감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법찾기도 어려운 북핵 외교가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안보리, 대북 결의안 도출 또 무산(6/4)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국 모임이 대북 결의안 도출에 또 실패함. 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대표부에서 5차 협의를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함. 주요국들은 그동안 ▲ 북한의 해외 자산 및 금융계좌 동결 ▲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 기존 결의안 1718호의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임.
- 이날 회의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의 북한에 대한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방안과 함께, 중무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강화해 시리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북한의 수출을 강력히 금지하고 지난 4월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선정한 3곳의 북한 기업들 외에 추가로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회사



- 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너무 고립시켜서는 안 되며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전함. 유엔의 한 관계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이견이 좁혀져 왔으나 오늘 회의에서 또다시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며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열흘 가량 지속해온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회의에 앞서 유엔 고위 관계자는 “주요 안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협의에서 내용이 조율되면 결의안 작성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은 1일 4차 협의 이후 잇따라 개별 연쇄접촉을 갖고 막판 절충작업을 벌여옴.
 - 한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대사는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 금수조치(embargo)도 결의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함. 이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제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 (북한의 핵)프로그램들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거나 현 사태를 비난하는 새롭고 진지한 결의를 수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기된 제안들을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는 상반된 언급임.

● 메드베데프, 對北 경제제재 지지 시사(6/4)

-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함.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3일 크렘린궁이 발표한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과의 인터뷰 전문에서 “우리는 경제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거나 현 사태를 비난하는 새롭고 진지한 결의를 수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기된 제안들을 지지한다”고 말함.
-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해왔지만,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지만 최근 사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핵실험과 이후 로켓 발사는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조치들”이라면서 “핵클럽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으므로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원자력발전 확산으로 핵사찰 체제 긴용해져”(6/4)

- 토머스 핑거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은 3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확산되면 “핵확산과 핵무장화의 위험”이 동반하므로 핵물질 도난, 핵관리 실패, 핵 테러리즘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핵사찰 체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고 말함.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정보위원장을 지내고 스탠 퍼드대 교수로 있는 그는 이날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글로벌 트렌드 2025: 변형된 세계(A Transformed World)’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 성장의 상업적 대안이 원자력”이어서 “향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더욱 많이 출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그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이 대부분이어서 이슬람 세계내에서조차 점차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의 테러 위협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면서 사회내 불만세력이나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불만세력 등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함. 그는 향후 15,6년 뒤의 세계 전망에 대해 “세계 금융위기에 의해 세계화의 흐름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변영의 확대’라는 세계화의 긍정적 면은 최대화하고 ‘소득 격차의 확대’라는 세계화의 부정적 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함.
- 이어 그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어서” 더 이상 미국 ‘일극주의(unipolarity)’는 통하지 않게 됐으나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를 일으킨 장본인도 미국이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인 만큼 앞으로도 미국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그는 한편 강연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北, 도발대신 협상 복귀해야”(6/3)

- 방한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공관에서 유명환 외교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는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 권종락 외교부 1차관 등과 만나 북한 핵실험을 비롯한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대책과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함. 한·미 양국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통일된’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결의안에 ‘금융제재’ 방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전



- 해집.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권종락 외교차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더 위험한 추가 도발을 하는 대신 비핵화를 향한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또 대북 제재와 관련, “우리는 여러 옵션을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한 뒤 “장기적인 전략이나 향후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말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아울러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도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미국 정부의 한·미 안보공약 이행 약속 등을 재확인함.
 - 그는 유 장관과의 오찬 회동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과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노력,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한·미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함.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상기시키며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이 같은) 다양한 이슈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오후 이상희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이 장관은 논의에 앞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에게 지난주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성과를 평가한 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에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윌리스 그레그슨 국방부 아태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미 정부 내 고위인사가 대거 포함되었음.
- “美고위관리, 김정은 후계 지명 확인” <요미우리> (6/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지난 2일 워싱턴의 한 모임에서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됐고,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일상적인 국가 운영을 담당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전함. 이 고위 관리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도 정운 씨를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이 고위 관리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음.
 - 신문에 따르면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은 “후계체제로의 이행과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김 위원장은 건강이 불안한 만큼 정운 씨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주기 위해 매우 급하게 행동할 필요성을 느끼고



● 中전문가 “北핵개발은 판단 착오”(6/3)

-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면 국제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오판으로 북한을 오히려 핵위험에 빠트리고 국내외에서 최악의 국면을 맞게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 중국의 국제군사전략문제 전문가인 평광취안(彭光謙) 중국국가안정책연구위원회 부(副) 사무총장은 3일자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기고한 시평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져 선제공격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봄. 평 부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은 완전한 핵무기를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핵무기 개발·보관과정에서 관리요원이나 기술상의 실수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은 국토가 협소해 방사능 누출사고가 나면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핵시설과 핵무기가 정교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반격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함. 평 부사무총장은 북한의 핵개발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실익이 없고 취약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핵개발보다는 경제를 희생시키고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임.
- 북한의 핵개발은 대외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져 평양 당국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함. 한편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면 자칫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방사능이 중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당국은 지난 달 25일 핵실험이 실시된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와 180km 거리에 있는 투먼(圖們)에서 핵실험 영향으로 인공 지진이 나고 지진이 연지(延吉)일대에서도 감지되자 즉각 방사능 누출 여부의 검사에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임.

● “美, 北 미사일 요격능력 크게 향상”(6/3)

-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3차례의 요격 실험을 바탕으로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인 패트릭 오라일리 중장이 2일 밝힘. 오라일리 중장은 이날 미 국방대학(NDU)에서 열린 미사일방어 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따른 3차례 실험에서 3번 모두 요격에 성공했지만, 미사일방어(MD)체계를 조정해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고 말함.
- 그는 회의 중 질문에 답하면서 요격 실험을 통해 목표 미사일을 특정 지점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됐다고 설명함. 그는 이어 누군가 외부에서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우리가 요격



● “北, 김정일 3남 후계자 지명 중국에 알려”(6/3)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3남인 김정운(25)을 지명했음을 북한 노동당 간부가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함. 이 신문은 노동당 간부와 관계가 깊은 북·중 관계 소식통과 양국을 왕래하며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김정운이 올들어 처음으로 당과 군의 인사권을 쥐 당조직 지도부장에 취임했다고 밝힘.
- 신문에 따르면 이 노동당 간부는 금년 초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 간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두로 전달함.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도 독제체제를 유지할지, 집단지도와 같은 체제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으며,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어떤 권한이 어떤 형태로 승계될 것인지가 불투명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지도부의 갈등이 있을 경우 후계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함.
- 북·중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당 조직지도부는 작년 12월 당내 일부와 군의 상층부에 김 위원장의 후계를 세습토록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부 통달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통달에는 후계자로 김정운을 나타내는 문구는 없으나 이 소식통은 “3대에 걸쳐 세습한다는 점에 대해 측근 간부의 양해를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간부들의 반발이 없어 김정운을 당 조직부장에 임명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조직지도부가 지난해 12월 고위 당간부들에게 후계자를 세습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부 통달을 내리고 사상교육을 지시했다”고 지난 3월 15일 보도한 바 있음.

● 러-中, “설득력 있는 대북 제재 필요”(6/2)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안보리의 ‘설득력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고 2일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함.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북한 핵실험 이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의견을 교환함.
-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의 설득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힘. 이날 전화통화는 중국 측의 요구로 이뤄짐. 양국 외무장관은 또 사태 해결은 오직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특히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면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함.

- 앞서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에 ‘압력’을 추가하는 동시에, 6자회담과 같은 협상 테이블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거나 고립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련국의 냉정하고 신중한 태도를 촉구하고 있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확산방지,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란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의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정부 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와 인터뷰에서 “안보리의 결정은 강력해야 하지만 장래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공고히 하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北, 핵탄두 소형화 등에 10~15년 걸려”(6/2)

-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때보다 5배가량 강한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장거리 미사일 체계와 결합시키는 데는 앞으로 10~15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보고서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함. 미 캘리포니아 소재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와 스콧 부르스는 지난 1일 발간된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진파 측정 결과 북한이 ‘의미있는 폭발’을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 “성공적인 두번째 폭발실험을 통해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또 이로써 김정일 정권은 핵 능력이 애매모호했던 이전의 취약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진 위치로 자리를 옮겨 미국 및 다른 강대국들과 상대하게 됐다고 덧붙임. 그러나 헤이즈와 부르스는 평양당국이 ▲중장거리 운송 체계 ▲소형 핵탄두 생산능력 ▲대기권 재진입시 열을 견딜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 등 3가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은 군사적 위력 과시보다는 외교적인 공세에 가깝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특히 “만약 북한이 다른 나라의 설계와 소재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장거리 미사일 체계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결합하는 데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함. 노틸러스 연구소의 분석가들은 북한의 다음 핵실험은 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장거리 미사일 추가 실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점진적인 핵능력 개선보다 더 나쁜 것은 이번



2차 실험을 통해 평양 당국이 무형의 핵 상품에 대한 신뢰성과 시장성을 얻게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함.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인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 헨리 소콜스키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과 핵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직접적인 위협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두 나라는 평양 측과 핵 및 발사 체계를 공유한 전력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말함. 미 스탠포드대의 핵 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핵커에 따르면 북한은 진귀한 핵폭탄을 수출하기보다는 핵연료 생산, 원자로 건설 및 운영, 플루토늄 추출 등 핵 연료 순환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한은 실험 전부터 이미 중동 지역 수출시장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었다”고 밝힘. 노틸러스 연구소의 헤이즈와 부르스는 북한이 이란과 ‘핵 동맹’ 형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즉 평양 측이 핵무기 설계와 실험 자료, 핵분열 물질 등을 제공하면, 테헤란 측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나눠 주는 그런 종류의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임.

- 그들은 “그런 동맹은 일단 한 번 만들어지면 두 나라의 개별적인 핵 개발 프로그램보다 훨씬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경고함. 한편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체로 북한의 폭발 실험이 성공적이었고 핵무기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데는 이견없이 동의하고 있음. 지그프리드 핵커는 실험지역 부근에서 진도 4.7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다는 미 지질연구소의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북한 핵의 폭발력은 2~4 킬로톤에 달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실험은 2006년 실험에 비해 약 5배 정도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함.

● 한·아세안, 北 핵실험·미사일발사 규탄(6/3)

-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Joint Press Statement)을 채택함. 한·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언론성명에서 “6자회담 합의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최근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9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와 제17차 아세안-EU(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규탄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정상들은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세안 10개국이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거의 북한과 수교했고 캄보디아 등은 북한의 우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

● <미 정부대표단 ‘화려한 구성’ 관심>(6/2)

- 북한의 2차 핵실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나선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화려한 면면을 자랑함.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미 정부 내 고위 인사가 총망라됐기 때문임.
- 미 국무부의 실질적 살림꾼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물론이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텐튼 레비 재무부 차관, 윌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짐. 대표단 단장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에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 다음의 2인자임. 하지만 그는 ‘오바마의 인물’로 알려질 만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후문임.
- 눈길을 끄는 인물은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임. 2004년 신설한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직을 맡은 이래 ‘불량국가’들의 대량 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자금줄 차단’ 임무를 수행함. 특히 테러자금 등과 관련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막는 일이 주요 업무임.
- 예상을 깨고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유임되면서 그의 존재감을 확인함. 핵확산이나 무기거래, 테러를 막기 위한 수상한 자금거래를 차단하는 데 책임자임을 잘 보여준 것임. 이에 따라 레비 차관이 북한 기업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관련해 방한 기간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카운트 파트’를 만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한때 나오기도 함. 하지만, 외교 당국자는 “스타인버그 부장관 수행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부인함.
- 보즈워스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 정부의 대북정책 총괄 실무 책임자임. 대북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아시아정책을 조언했었던 베이더 선임보좌관은 NSC에서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함. 이 밖에도 미 정부에서 한반도 관련 국방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그렉슨 국방부 아태차관도 포함돼 있음.
- 고위 당국자는 “주요인사들이 총망라된 미 정부대표단의 순방은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함의나 중량감이 있다”면서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 동북아 지역에 초래하는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금융·정보·합참 분야에서의 포괄적 대처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함.



● <北이 핵보유하면 中은 핵에 포위당한다>(6/2)

- “세계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지닌 6개 국가에 포위되는 상황이 시작되는 징후를 팔장끼고 쳐다보고만 있겠습니까?”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2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결사반대하는 이유를 이 같이 한마디로 밝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이 곧이어 핵무기를 갖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동쪽에서 남북한과 일본 등 6개국의 핵무기에 포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임.
- 특히 일본은 과학·기술력이 중국에 비해 앞서 있기 때문에 일단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중국 핵무기 보다 성능이 월등한 무기체제를 갖춰 가장 위협적인 가상적이 되는 시나리오는 중국 지도부에 악몽이라는 분석임.
- 이와 관련, 칭화(淸華)대학의 동북아 전문가인 류장용(劉江永) 교수는 최근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구실로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군비경쟁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함. 중국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대북 강경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지만 석유와 식량지원 중단 등 ‘극약처방’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옴.
- 대만의 연합보는 지난달 31일 사설에서 중국이 대북 강경조치는 ‘화난 가면’을 하나 써본 것이지 실제로 북한에 완전히 안면을 바꾸는 정책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고 분석함. 중국은 북한에 핵개발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국제사회의 분노에 동참하는 전략상의 필요에서 종전과 달리 북한에 확고하면서도 냉랭한 태도를 취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잠정조치일 뿐이지 전면적인 제재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임.
- 베이징 당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의 파멸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대치 국면이 풀리고 안보 우려가 불식되면 핵개발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임.
- 한편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변경연구소 뤼차오(呂超) 소장은 1일 신화통신 자매지인 국제선구도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한 등에서 강경대응들이 서로 오고갔지만 휴전선이나 북-중 국경에 긴급 상황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뤼 소장은 북한은 한-미연합군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 후계자를 확립하기 위한 내부정치 목적에서 핵실험 등 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강수가 한·미·일의 양보를 얻어내면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함.



● 백악관 “北 핵확산이 최대우려”(6/2)

- 미국 백악관은 1일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국가들에 인도하는 확산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핵확산 우려에 대해 “최대 우려는 이런 무기(핵무기)를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도록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핵확산 문제에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북한의 최근 행위와 관련, “그들은 준수하기로 합의한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하고 있다”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함.
- 기브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제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 하는 비이성적인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만 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하지만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물질 거래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어떤 조치들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고 취해질 수 있는지 깊게 논의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

● 안보리 주요국 협의 진통..“일부 진전”(6/2)

-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음.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 중인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1일 북핵실험 후 네 번째 협의를 가졌으나 결의안 마련에는 또 다시 실패함.
-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구체적인 문항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제재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미·일 등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회의가 난항 중임을 인정함.
- 유엔 외교관들은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과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거부,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여행금지 확대 및 광범위한 무기 금수 조치 등 기존 결의안 1718호를 대폭 강화 하는 제재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러가 신중한 대북 접근 등을 내세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함.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권 강화 문제가 논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관련 활동을 일절 금지하면서 북한을 오가는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미·일이 제안한 새로운 안은 검색을 의무화 시키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강경 조항이 북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유엔 외교관들은 전함. 그러나 수전 라이스 미 유엔대사는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토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이 토론들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이어 “이 과정 속에서 매우 가치있고 강력한 결의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中 전문가 “北 핵무장 통해 남북통일 추진”(6/1)

-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이유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 장거리 미사일 보유, 서해 해상분계선 조정, 한반도 통일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밝힘. 장렌구이(張璉圭<王+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1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최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장 교수는 “북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조치는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지도부는 정권세습 전에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북한 지도부의 임무는 첫째, 북한을 진정한 핵보유국으로 전환시키고 둘째,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무장하며 셋째, 서해 해상분계선을 재조정하고 넷째,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은 이를 위해 지난 1월17일 대남 전면 대결 선언, 1월30일 불가침조약 폐기 발표, 4월5일 로켓 발사, 6자회담 영구 탈퇴, 5월25일 핵실험 실시 등 올해 초부터 한반도 긴장을 계속 격화시켜왔다고 장 교수는 설명함. 장 교수는 “북한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는 통제불능의 위기가 잇따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美 핵확산 금지노력 北엔 ‘무용지물’(6/1)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확산금지 노력이 북한처럼 준수할 의사가 없는 국가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옴.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어길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해왔으나 북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이용해 이익을 챙겨왔다고 1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특사인 스티븐 보스워스가 아시아지역을 순방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알맹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신문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폭격이나 무역제재, 식량원조 중단 등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



을 표시함.

- 핵시설의 폭격은 생각할 수 없고 무역제재 역시 북한이 서방에 팔아 먹을 상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는 것. 식량 원조 중단은 굶주리고 있는 무고한 북한 주민을 볼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이 지경이 된 것은 미국이 말로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도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에 급급했고, 북한이 강하게 나올 때마다 ‘당근’을 제공해온 행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음.
-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처음엔 북한의 정권교체를 대북 정책목표로 제시했으나 북한이 NPT를 거칠게 위반하자 직접 협상에 나서 북의 정권 안전을 보장하고 중유와 식량, 경수로 등을 제공함.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때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고 무역·금융 규제 등에 나섰으나 결국 북한과 다시 직접 협상에 나섰고 얻은 것도 없이 각종 규제를 모두 해제함.
-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한지 불과 3주후 6자회담의 재개를 선언한 부시 행정부는 2007년 2월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고 원자로를 봉인하는 한편 60일 이내에 핵프로그램 리스트 일체를 제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받아들인데 동의했다고 발표함. 하지만 북한이 제출한 핵 관련 자료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 빠짐. 결국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해체하는 장면만 TV를 통해 보여줬을 뿐 여전히 그 외의 조치들은 취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를 철회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함.
- 이같은 대북 유화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가 이어받았으나 북한의 김정일은 다시 과거 재미를 본 ‘익숙한 수법’으로 돌아가 지난 4월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유엔의 핵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음. 김정일은 이번에도 자신의 ‘헛된 군축 약속’을 믿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늘 그랬던 것처럼 ‘당근’을 한 아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임.

● <日, 北 화물검사 한계 많다>(6/1)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새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가 채택된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일 전함. 일본이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 화물검사를 할 경우 근거가 되는 것은 ‘주변사태법’에 기초한 ‘선박검사활동법’임.
- 주변사태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내전, 체제 붕괴 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법임. 이 법은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본 주변 지역에서 무력 분



쟁이 발생했을 때나 주변 국가의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많은 난민이 일본에 유입될 가능성이 클 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난달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총리실은 이를 주변사태로 인정할지 논의했지만, 사실상의 전시 상태로 볼 수 있는 주변사태로 보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주변사태로 인정하지 않으면 선박검사활동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이 법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선박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제약도 많음.
- 이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모두에서 북한 핵실험을 주변사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선박검사를 할 수 있는 새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신중론을 제기함. 하마다 방위상의 이런 입장은 “새 법을 만들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검사할 경우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라는 정부 내 우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짐.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이를 주변사태로 인정하고 선박검사활동법에 따라 북한의 선박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화물검사를 각국에 협력 요청하는 선으로 강도를 낮추면서 이를 실행하지 않았음.
- 이번 유엔 안보리의 논의 과정에서도 중국이 화물검사를 의무화하는데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짐. 안보리에서 화물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엔 일본도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화물검사를 단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 내의 분위기로 알려짐.

● 키신저 “北, 핵무기 нес용 생각은 환상”(6/1)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내 강경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31일 CNN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일축함.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용인하기 힘든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핵 군비경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데 ‘충분히’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원자력관리 프로젝트’(PMA)의 지역 전문가 마틴 말린과 장 후이는 보스턴 글로브지 기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함. 이들 전문가는 미국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즉각적인 직접 대화를 약속해야 하며 이 같은 상징적 조치는 현재 후계자 승계 문제에 당면한 북한에 상당한 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다음 단계는 이미 합의된 대로 북한 핵무기의 불능화와 해체를 다뤄야 하며 ‘행동대 행동’ 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점진적이



고 구체적인 혜택 제공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로드맵은 후속 단계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함. 이들은 새로운 로드맵의 목표는 안전보장과 전면적인 외교관계 수립, 경제개혁 및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등을 포함해야 하며 미국이 그 첫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나. 미·북 관계

● 클린턴 “여기자 석방위한 특사 검토”(6/6)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황에 따라서는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함.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기자 석방이라는) 인도적 임무에 엄격히 국한된 ‘특별대표’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지금 당장은 평양에서 여기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히 끝나고 이들이 석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석방문제가 지연될 경우, 특사파견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침. 그는 “지금 열리고 있는 재판은 여기자들의 석방과 귀국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다양한 채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 관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힘. 이어 그는 “우리는 북한 정부가 이들을 조속히 석방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함.
- 클린턴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 “무기 수출 금지든 다른 조치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있다면 그에 따른 실제적인 결과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혀 결의안에 제재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클린턴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과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말함.

● 美 “北행위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 미흡”(6/4)

-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호전적 발언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는 3일 북한의 행위는 이를 충족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2차 핵 실험 직후 추가 금융제재와 더불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강경 발언에서 물러선 것임.
-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강경한 발언은 현명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가 테러의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



적합. 크롤리 부대변인은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려면 법적 충족 요건이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그러한 법적 요건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 이는 국무부가 현재까지 일어난 북한의 도발행위만 가지고는 테러지원국 재지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앞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직후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크롤리 부대변인은 또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이 일종의 실험을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그것이 핵실험용으로 고안된 것인지 실제 핵실험이었는지는 모른다”며 “지각변동의 징후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하지만 크롤리 부대변인은 “북한에서 보여준 것은 핵보유에 대한 야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야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북한이 6자회담에 한 약속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북한이 분명히 핵무기 보유, 주변국과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관계정상화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美, ‘北슈퍼노트’ 확산 근거는>(6/4)

-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2005년 9월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미국 정부의 위조지폐 제조 일당 소탕작전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음. ‘스모킹드래곤’이라 불렀던 이 작전은 불법적인 달러위조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4개 미 정부 부처에서 200여 명의 전문가가 동원돼 펼쳐짐.
- 미 법무부는 2005년 8월 비밀요원 중 남녀 한 쌍을 연인 관계로 가장해 미국 뉴저지 앞바다에서 선상 결혼식을 열고 무기와 위조지폐, 마약, 위조담배를 미국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원들을 초청함. 결혼식에 쓰인 배 이름을 따 ‘로열 참’으로 명명된 이 작전이 펼쳐진 시기에 비슷한 작전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전개됐는데 그 작전명이 ‘스모킹드래곤’임.
- 흔히 ‘스모킹드래곤’이라고 통칭되는 이 2개 작전을 통해 미국은 중국 범죄조직이 북한에서 제조된 위조달러와 담배,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함. 이를 통해 북한과 연루된 범죄자들이 돈세탁을 했고 그 자금을 유통시키는 창구가 마카오



의 은행들이 드러나 소문으로만 돌던 북한의 위조지폐, 담배 등 불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임. 특히 미국 정부는 마카오의 여러 은행 중 BDA를 겨냥했고 같은해 9월 미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 하던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함. 북한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 이른바 ‘BDA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것임.

● “美, 안보리 제재 겨냥 北슈퍼노트 압박”(6/4)

-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미화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문제를 압박카드로 활용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짐.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3일 “미국은 북한이 슈퍼노트를 만들어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일련의 도발행위를 하는 것과 맞물려 슈퍼노트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는 등 북한을 옥죄려 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앞두고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금융제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100만달러 상당(9천904장)의 슈퍼노트가 압수됐던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와의 정보 교환 및 수집 작업 등에서 공조를 벌이며 유통경로 등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5일 중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은 한·미 공조를 통해 얻은 북한의 슈퍼노트 제작·유통 관련 정보를 중국 측에 설명, 추후 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동의를 견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앞서 워싱턴타임스는 2일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근 승진한 오극렬 대장과 그의 일가가 ‘슈퍼노트’ 제작과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북한의 위폐문제가 재부각될 것임을 예고함.

● 탈북자 일가족 4명 미국 입국<VOA>(6/4)

- 한 동남아시아 나라에 머물던 탈북자 일가족 4명이 3일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86명으로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이들 탈북자 가족은 지난해 10월 동남아의 제3국으로 탈출한 뒤 그동안 한국 외교공관 시설에 머물며 미국행을 기다려온 50대 초반의 서모씨 부부와 아들 두 명이라고 VOA는 설명함.

● “北 美여기자 통화허용은 대화재개 여지”(6/4)

- 북한 당국이 자국내에 억류중인 미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해 미국내 가족들과의 전화통화를 허용한 것은 대화재개의 여지를 시사한 것



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지적함. 이 신문은 “(국제)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 정권인 북한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특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한 이튿날(26일) 전화통화를 허용한 것은 북한이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미국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 걸쳐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화통화 사실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북한이 재판에서 이들 여기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그러나 북한의 전화통화 허용은 앞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고 해석함.

● 미국무부 “스웨덴대사 北역류여기자 개별접견”(6/2)

- 미국 국무부는 스웨덴 대사가 1일 북한이 역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을 개별 접견했다며 여기자들의 석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도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매츠 포이어 스웨덴 대사가 미국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를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말함.
- 우드 대변인은 이들 여기자의 석방문제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에게도 “우선적인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과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준비 등과 연관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기자들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북한은 그들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미국인 여기자들을 풀어주어야 한다”며 “핵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함. 우드 대변인은 또 이들 여기자 석방을 위해 고위 인사나 대표단을 북한 파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함.

다. 중·북 관계

● “中, 北 동창리와 50km..우려 크다”(6/6)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미사일 발사기지가 중국에서 5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중국의 국제뉴스 전문지 세계신문보(世界新聞報)는 5일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가 중국 국경에서 50km도 떨어져 있지 않고 국경 도시인 단둥(丹東)에서는 60km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과거 대포동 2호 등 미사일을 발사해 온 무수단리 기지보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훨씬 가까운 곳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중국의 강한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함. 북한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중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한편 신문은 또 북한이 새로 설치한 동창리 발사기지가 무수단리에 비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분석함. 동창리는 무수단리보다 산세가 깊어 은폐가 더 쉽고 중국 국경과 가까이 있어 미국과 일본의 정보수집과 요격 가능성도 크게 낮아는데다 동쪽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레이더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는 등의 몇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함.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는 10층 높이의 발사탑과 이동식 발사대, 로켓 모터 테스트 시설 등을 갖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보다 현대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北이 中을 겁내지 않는 4가지 이유>(6/2)

- 북한이 최대 우방인 중국의 반대에도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중국의 분석가인 지우(季吳)는 중국의 언론사이트인 남방보망(南方報網)에 1일 게재한 평론에서 이런 움직임의 원인은 북한이 중국을 4가지 측면에서 겁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는 우선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이란 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곳은 중국과 국경에서 수십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는 중국 역시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이 점을 잘 아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대를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임.
- 두번째 이유로 그는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을 꼽음.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분쟁에 대해 무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면서 유엔의 각종 제재조치에 반대해 옴. 또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항의의 뜻에서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의 방북을 취소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반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방법의 해결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은 안심하고 있다는 것임.
- 셋째로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중국은 북한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북한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로 꼽음. 그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중국에 유입돼 중국의 정세 역시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석유, 식량, 생활용품 등을 북한에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 마지막으로 북한은 자국으로 인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중재자로



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그는 분석함. 중국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수시로 대만, 티베트, 인권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존재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그는 분석함. 북한은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함.

● <中, 대북교류 잠정 중단>(6/1)

-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강경일변도 정책에 썩기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베이징의 외교 및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부터 예정됐던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부위원장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대표단의 북한 파견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측의 중국방문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관측됨.
- 베이징 당국은 당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왕자루이(王家瑞)공산당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백지화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최소한 당분간은 물건너 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분석임.
- 북한이 중국의 중재를 통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아 베이징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됐었음. 중국 당·정 지도부의 방침은 실무진들에게도 전달돼 북-중간에는 당분간 실무진의 상호 파견없이 최소한의 외교 채널만을 남겨둘 것으로 알려졌다.
- 북-중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8일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연 데 이어 60여개의 교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음. 이러한 문화교류행사는 북-중관계가 냉랭해짐에 따라 당분간 중단 또는 연기되면서 열기가 식고 빛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임. 중국은 오는 10월6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사태 악화의 진전여부에 따라 원 총리의 방북도 장담할 수 없게 됨.
- 한편, 중국에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중국을 '미국에 아부, 추종한 세력'이라고 우회적으로 비난하자 북·중관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중국 젊은 엘리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북·중관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대북 정책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됨.



라. 일·북 관계

● “김정운 92년 극비 일본 방문” <日신문>(6/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운씨가 1992년에 일본에 비밀리에 입국했던 것이 경찰 당국의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6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그는 당시 정교하게 위조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경찰 당국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출국한 뒤였기 때문에 입국 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정운씨는 당시 9세였으며, 보호자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제시하고 비자를 받음. 당시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찰 당국은 정운씨와 비자 신청 당시 동행한 사람의 입국을 확인함. 며칠 뒤에는 정운씨의 모친이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4번째 부인인 고영희씨(2004년 5월 사망)로 보이는 여성이 동생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프랑스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이용해 일본에 입국한 것도 경찰은 확인함. 고씨는 일본에서 정운씨와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함.

● 日정부, 北 후계구도에 비상한 관심(6/4)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인 김정운(26)이 유력하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함. 일본 정부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의 최근 행위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실적 쌓기로 분석하면서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무시한 행동을 계속 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이와 관련, 외무성의 고다마 가즈오(児玉和夫) 외무보도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내부동향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해내갈 것이다”고 밝힘. 일본에서도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인 김정운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정부 관계자는 “3남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정보가 복수의 외국 정부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함.
- 일본 정부내에서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국민을 총동원해 경제재건을 위한 ‘150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도 후계 체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여러가지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김정운이라는 인물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가 거의 없어 후계자 지명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짐.



마. 기타

● “獨, 탈북자 가장 많이 수용”(6/5)

- 미주와 유럽 서방국가들 가운데 지난 1월 현재 독일이 276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여 탈북자 최대 수용국인 것으로 나타남.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은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전략센터가 ‘국내외 탈북자 실태 변화와 금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발제문에서 ‘해당국들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보고한 통계들에 근거한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힘.
- 이 팀장은 미국, 캐나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7개국이 유엔난민지위협약에 따른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해 받아들인 탈북자수는 모두 522명으로 집계됐으나 “국가에 따라선 수명 내지 수십명 단위는 소규모로 간주해 보고자료상에 생략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난민 인정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함. 522명은 2008년 12월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만5천57명의 약 3.5%에 해당함.
- 이 팀장은 “독일의 경우 지난 2002년도 통계에 225명이 잡혔는데, 이중 상당수는 1989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에 파견돼 있던 북한 외교관 및 그 가족들이나 북한출신 유학생들로서, 북한 당국의 귀국 명령을 거부하고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거나 잔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관련 수기와 증언들로 미뤄,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북한에 돌아가면 이를 주변에 발설할 위험성 때문에 정치적 처벌이나 비판 및 감시 등 각종 불이익의 대상이 될 것을 감지해 독일에 남았을 수 있다고 이 팀장은 분석함.
-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147명을 받아들인 영국은 2004년을 기점으로 망명 신청 건수에서 독일을 추월했고 2007년에만 130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인정 건수 누계도 계속 늘고 있지만 최근 한국정착 탈북자나 조선족들의 ‘위장’ 입국 사례들이 다수 확인돼 인정 절차가 훨씬 엄격해짐.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은 2006년 5월 태국으로부터 6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이래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 올해 중으로 100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아일랜드도 각각 5~15명의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함. 캐나다는 지난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입국 허용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 지난 2월까지 14명을 기록함. 캐나다에선 한인교포 2세출신 변호사 3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1년반만에 회원이 400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한 ‘한보이스(Han Voice, 대표 사이먼 박)’나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 등 캐나다 한인사회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이 팀장은 소개



함. 한편 일본에도 현재까지 최소 2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정착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은 1960, 70년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귀환 난민’들로 일본은 이들을 난민이나 자국민 어느 쪽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 팀장은 “탈북자의 최대 정착 환경은 한국이지만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이들 다양한 국가들이 조금씩 역할을 분담해 문제 해결에 나설 때 중국 당국도 강제송환 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임.

● <美 언론에 비친 北 권력승계>(6/4)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력 승계가 험로에 직면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함.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배권을 아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지난주 2차 핵실험을 지시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권력승계의 길이 확실히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정보당국의 몇몇 관계자들은 북한 군부와 김정운의 형이 막후에서 권력승계 계획을 막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북한의 마지막 우방인 중국도 3대째 권력을 세습하는 것에 매우 불편한 심기인 것으로 알려짐. 김정운으로의 권력승계에 대한 한 시험대는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일 수 있음.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최근 몇년간 군부와 안보정책 분야의 장악력을 키운 오 부위원장의 권력 승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의 매제로 일상적인 국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도 주목하고 있음. 신문은 3남인 김정운의 후계자로의 부상은 장남인 김정남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김정남은 지난 2001년 일본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걸린 사건으로 그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을 더하기 전까지는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고려됐었다고 소개함.
- 신문은 김정남은 알코올과 여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은 군부가 김정남을 후계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함. 신문은 북한의 2차 핵실험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와 더 관련돼 있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면서 김정운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없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누가 북한을 운영하는지 불확실하고 권력승계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미국에 양보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를 피하려는 상황에서 북·미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의 아시아부서에서는 김정운의 사진이 게시



돼 왔었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을 ‘친애하는 지도자’(Dear Leader)라고 표현하는 것에 빗대어 김정운에게는 ‘귀여운 지도자’(Cute Leader)라는 별칭을 붙였었다고 소개함. 이와 함께 워싱턴 타임스(WT)는 김 위원장이 셋째 아들이 후계자로 공식지명됐다는 보도는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북한이 권력승계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함.

- WT는 북한문제 전문가인 전직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권력승계 시작이 반드시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명됐다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북한이 차기지도자에게 걸맞은 정당성과 신뢰성, 자격요건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신화’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전함. WT는 또 “후계관련 보도가 맞다면 4월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주 핵실험, 단거리미사일 발사, 계속되는 신랄한 비난 등 북한의 최근 호전적인 행위가 (후계구도와 맞물려 일어나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덧붙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북핵 ‘외교→군사문제’ 인식전환>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이 ‘외교적 협상 대상’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미동맹 문제로 보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며 “이를 한·미 정상 합의문에 ‘확장 억제력’ 개념을 넣어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힘.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6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동맹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것은 이를 외교적 협상을 넘어 안보상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즉 한·미 양국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비확산을 위한 외교적 협상의 대상을 넘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것임. 양국 외교장관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제력’ 개념을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입힘.
- 일각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인식의 전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방어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의지를 재확인함



으로써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함.

● 한·미외교 “北 핵·미사일 한·미동맹문제로 대처”(6/6)

- 유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방안이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늦어도 내주 초반까지는 나오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또 유 장관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 독자적인 제재 문제와 관련, 북한 미사일 핵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클린턴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 유 장관은 최근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함. 미국은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등을 단행할 경우, 슈퍼노트를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임. 이어 그는 이날 회답에서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했다”면서 “정보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이르지만 언론에 보도됐듯이 (권력세습)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의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억류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견지에서 여기자 2명뿐만 아니라 한국인 근로자도 조속한 시일내 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한·미 간 외교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미국인 여기자 석방을 위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 유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함. 클린턴 장관은 이번 한·미외무장관 회답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함.

● 국내 유입 ‘슈퍼노트’에 美정부 관심(6/4)

-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경찰청이 국내 유입 사실을 적발한 ‘슈퍼노트’(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9천904장의 유통 경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보여 주목됨. 특히 미국 정부는 이 슈퍼노트가 중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제작된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짐. 4일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0일 슈퍼노트의 국내 유입이 적발된 직후 미국의 특별수사관 등 2명이 부산경찰청을 찾아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함.
- 같은 해 12월17일과 올해 3월4일에는 미국 재무부 하와이 지부장 등 4명이 부산을 다녀감. 이들은 수사 관련 서류와 압수 위폐,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또 지난 3월11일에도 미국 재



무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6명이 부산경찰청을 찾아와 수사진척 상황을 문의하고, 우리 측과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함. 이들은 아울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들과도 만나 위폐의 유통 경로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서울에서 만나 ▲한·미 양국을 포함해 슈퍼노트가 유통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슈퍼노트 위조 재료의 북한 유입 차단 등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짐.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정보당국은 국내에 유입된 슈퍼노트가 중국을 통해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제조된 뒤 점조직 형태로 유통된 게 아닌지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슈퍼노트 판매총책의 실체와 소재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수사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설명함.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슈퍼노트 9천900여 장을 밀반입, 부산 서구 충무동 일대 암달리상을 통해 환전하려 한 혐의(특가법상 외국통화 위조 등)로 김모(50) 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판매총책으로 추정되는 박모씨를 수배함. 이들은 위조지폐를 100장씩 묶어 100만 달러 가까이 몰래 들여온 뒤 실제로 환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일부를 부산 등의 암달리상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음. 경찰에 압수된 슈퍼노트는 숨은 그림과 미세문자 등이 정교하게 인쇄돼 있고, 햇빛에 비추면 색이 변하는 것까지 진짜와 똑같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軍, 함대공 미사일 SM-2 84기 추가구매(6/3)

- 한국형 구축함(KDX급)에 장착될 함대공 유도탄 ‘SM-2’ 84기가 미국으로부터 추가 도입됨.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SM-2 블록ⅢA 46기, 블록ⅢB 35기 등 모두 84기를 정부대 정부간 군사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판매키로 하고 이를 지난달 말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힘.
- DSCA가 대한민국 판매를 통보한 것은 이들 미사일과 관련 부품, 시험·지원 장비 및 훈련 장비 등 모두 1억7천만달러에 달함. DSCA는 홈페이지에서 “이번 판매로 한국의 방위역량이 강화되고 연합작전을 지원하는 미국 및 다국적군과의 상호운용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함.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작년 10월 SM-2 84기의 추가도입을 미 측에 요청한 바 있다”며 “아직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지만 조만간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함.
- SM-2는 함정에 탑재돼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유도 미사일로, 현재 광개토태양함 등 KDX-I 과 문무대양함 등 KDX-II에 실전 배치돼 있음. 현재 전력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KDX-III 1번함인 세종대왕함에도 80발의 SM-2를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도입될 SM-2는 세종대왕함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



집. KDX-I 과 KDX-II에는 각각 20~30여발의 SM-2가 탑재되어 있음.

● **李대통령 “한·미공조 토대 주변국과 단합해야”(6/4)**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과 관련,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협력하여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 미 정부 고위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해야만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강조함. 이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래 한·미정상간 긴밀한 의견교환이 이뤄져왔으며 오는 16일 워싱턴 개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관심사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며 “한·미관계가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함.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록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북한 핵실험 직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참여기로 한 것은 비확산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에 강력한 협력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환영함. 그는 또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하고 나서 다시 협상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미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한이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함.

● **美관리 “전작권 전환, 韓안보 영향없어”(6/4)**

-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주한·미군이 예정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에 한국군으로 전환해도 한반도 안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전환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 이 고위 관리는 2일 워싱턴DC에서 조선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전작권 이양에 관한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서 2012년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도 안보 위협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점을 고려, 전환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함.



나. 한·일 관계

● 李대통령 “日 정치지도자, 용기 필요”(6/5)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크게 결단하면 우리 한국민들은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돼 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가까운 나라이고 여러모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도 과거사에 묶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오히려 과거에 대해 흔쾌하게 사과함으로써 오히려 더 국제사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선진대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대표는 “전적으로 좋다”고 동의함. 이 대통령은 또 “내년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인데 이는 한·일 관계의 새 페이지를 열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고, 이에 하토야마 대표도 “일본 내에는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식민지 침략을 미화하는 풍조도 있다”며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은 없다.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선 안된다”고 화답함.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동북아 각국과의 국제 관계 등에 대한 민주당의 진취적인 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평가함.
- 하토야마 대표는 “평소에 내세웠던 게 우애의 정신인데, 그런 정신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로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함. 하토야마 대표는 또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없었다”며 “이번에 정권교체 이루게 되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외교에 있어서도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려 한다”고 말함.
- 북한 핵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역사의 흐름이 빨리 앞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거꾸로 너무 빨리 역행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의 틈새에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했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대로 잘 안될 것”이라고 강조함. 하토야마 대표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한·일 협력에 미국과의 공조, 그리고 중국을 끌어들이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함.



다. 미·중 관계

● 中, ‘텐안먼 진상규명’ 美요구에 반발(6/4)

- 중국 정부는 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20주년을 맞아 공개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한 미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텐안먼 사태 20주년 기념 일인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근거없는 주장은 국제법과 중미 공동성명 3개항의 합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함.
- 친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정치적 편견을 버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양국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3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텐안먼 시위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인 진상조사와 희생자 유가족과의 대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힘.
- 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텐안먼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다시한번 되풀이함. 그는 “1980년대 말에 중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풍파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당과 정부는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함. 그는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 경제와 사회는 중대한 성취를 이룩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걸어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중국의 국가정세와 대다수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과 중국 인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한다”고 강조함.
-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신 기자들은 텐안먼 광장의 외신기자 출입을 통제하고 사태 주역들의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의 정당성을 따졌고 친 대변인은 텐안먼 사태를 살인이라고 표현한 한 외신 기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설전이 오감.

● 美·中, 내달 전략경제대화 개최 합의(6/2)

-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하순 워싱턴에서 기존 대화보다 수준을 격상시킨 새 전략경제대화를 갖기로 합의함. 중국 신화통신은 2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을 방문 중인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함. 이에 앞서 후진타오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회의의 출범에 합의한 바 있음.
- 이번 회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주재하며 경제문제는 가이트너 장관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주재함. 이 채널을 통해 양국은 경제, 무역·통상 분야에다 외교안보 분야까지 포함시켜 중요한 현안과 공동관심사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임. 후 주석과 가이트너 장관은 또 세계 금융위기와



의 전쟁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함. 후 주석은 가이트너 장관과 만나 “중·미관계가 발전을 위한 좋은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략경제대화는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데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은 전략경제대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 전략적, 긍정적, 장기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양국은 이미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이미 세계 경제가 회복과 안정의 징후를 일부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함.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이날 가이트너 장관과 만나 무역과 투자분야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함. 앞서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과 달러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 관리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 은 또 미국이 일시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음.
- 가이트너 장관은 제1차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준비하는 한편 중국에 미국 국채를 계속 사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음. 그는 “나는 중국에 와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미국 경제의 강도나 회복력, 활력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함. 중국은 미국 국채를 7천680억달러어치나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지만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달러화 약세를 우려해 미국 국채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가이트너 장관은 또 “중국은 달러화가 앞으로 오랫동안 세계 기축통화로 머물러야 한다는 점에 미국과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함.

● 中 “PSI 참가국 입장 이해”(6/2)

-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PSI 참가국들의 입장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PSI 가입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현재 어떤 형태로든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국제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PSI 참가국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관심을 이해한다”고 말함.
- 그러나 친 대변인은 “중국은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PSI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틀을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친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PSI에 전면적 참여를 선언한



한국을 비롯한 각 참가국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임.

- 중국은 스스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에 따라 국제협력을 강화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친 대변인은 덧붙였음. PSI는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11개국이 발의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됐으며 최근 가입을 선언한 한국을 포함해 9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음.

● 美·中 군사대화 재개…북핵 논의(6/1)

- 중국과 미국이 고위급 군사대화를 열고 북한 핵문제와 군사 신뢰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함. 중국 차이나 데일리는 1일 중국 국방부가 제10차 미·중 국방자문회담(DCT)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면서 이같이 보도함.
- 중국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관례에 비춰보면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미·중 국방자문회담은 지난 2007년 12월 워싱턴에서 제9차 회담을 거행한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고위급 군사대화임. 중국은 특히 지난해 10월 미국이 중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대만에 무기를 팔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모두 동결함.
- 이와 관련, 중국의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고위급 군사대화가 재개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함. 이들은 “이번 회담은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물론 군사 신뢰 제고 방안 등 단골 의제들을 논의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함.

라. 미·일 관계

● 日 총리들, 미-일 비밀 핵협약 알고있어(6/1)

- 미국과 일본이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핵무기 운반 함정이나 항공기의 일본 중간기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기로 한 비밀협약을 일본의 총리와 외상등 일부 최고위 관리들이 알고 있었다고 전직 외무성 차관들이 최근 교도통신에 밝힘. 직업관료로는 외무성 내 최고위 직인 4명의 전직 외무성 차관들은 교도통신에 하시모토 류타로와 오부치 게이조 등 일부 총리들이 핵무기의 일본 기착을 용인한 미·일 간의 비밀협약을 알고 있었다고 밝힘.
- 미·일 안보조약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 영토로 반입할 경우 사전 협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1960년 조약개정시 미국은 핵무기 배치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항공기나 함정에 의한 일시 기착 등은 조항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일본 측과 비밀협약을 맺었음. 이 비밀협약 내용은 지난 1990년대 미 국무부가 관련 문서들을 기밀해제하면서 내용이 공개됐으나 일본 정부는 비밀협약의



존재를 계속 부인해 옴. 비밀협약 체결에 관여했던 4명의 전직 외무차관들이 일부 일본 총리와 외상들이 비밀협약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마. 중·일 관계

● 日·中, 7일 도쿄서 각료급 경제대화(6/2)

- 일본과 중국 양국이 오는 7일 도쿄(東京)에서 각료급 경제대화를 갖고 거시경제 정책과 통상, 환경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협의할 예정임. 2007년 12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뒤 이번이 두번째인 고위급 대화에서는 일본측은 중국 정부가 도입 예정인 외국제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강제 기준인증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가짜 브랜드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함.
- 일본측에서는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금융·경제재정상, 가네코 가즈요시(金子一義) 국토교통상 등의 5명의 각료가 참석할 예정임. 또 중국측에서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비롯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등 5명 전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함.
- 경제대화와는 별도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왕 부총리와, 나카소네 외상이 양제츠 부장과 각각 개별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中, 日의 핵개발 가능성에 촉각>(6/1)

-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동북아가 군비경쟁에 돌입하는 사태로의 발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일 '日, 북한에 선제공격 논란'이라는 제목의 톱기사에서 일본 정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본의 열망을 폭로함.
- 이는 일본이 언젠가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동북아에 군비경쟁 시대가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우려가 우회적으로 표시된 것이라는 분석임. 환구시보에 따르면 칭화(淸華)대학의 동북아 전문가인 류장용(劉江永) 교수는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구실로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힘. 류 교수는 이어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군비경쟁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전세계가 일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말하고 외신과 일본 매체들을 인용, 일본에서 대북 선제공격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함.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한 발언과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일본의 일부 강경인사들의 언행을 제시함.

-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주장에도 방점이 찍힘. 북한은 미국을 목표로 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60) 전 항공막료장의 발언도 주목됨.
- 모스크바대학의 국제정치 전문가인 카와리프 교수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미국은 일본의 핵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봄. 한편 환구시보는 31일자에서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의한 ‘핵 없는 세상’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중국의 핵무기 감축을 요구했다고 보도함.

바. 중·러 관계

● 中-러시아 7월 합동군사훈련(6/6)

- 중국과 러시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양국 영토를 오가며 반테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국영 중앙TV방송인 CCTV가 6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을 인용, 보도함. 마샤오텐(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이 이끄는 중국군사대표단은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끝난 러시아측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반테러합동훈련의 시기, 규모, 병참방법 등에 합의함. 양국에서 총 1천500명이 참가하는 이번 합동훈련은 1단계는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실시되며 2-3단계 훈련은 중국 동북 3성에서 이뤄짐.
- 중-러시아간 이번 반테러 합동훈련은 올해 양국간 실시되는 25차례의 합동훈련의 일환임.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18일 타지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병력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합동군사훈련에 나란히 참여함. 냉전시절 국경분쟁으로 한때 관계가 험악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맞서는 군사동맹체로 부상하고 있는 SCO를 창설했으며, 지난 2005년 첫 합동군사훈련 이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사. 기타

● 中, 외교부 부부장에 장즈권 임명(6/6)

- 장즈권(張志軍.56)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외교부 부부장에 임명됨. 장즈권 부부장은 공산당 대외연락부에서 미국·북유럽국장, 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한 유럽 및 미주 외교 전문가임. 또 장즈권 부부장이 맡아온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자리에는 젊은 엘리트인 류제이(劉結一.52) 외교부 부장조리가 임명됨. 중국 정부는 이밖에 홍콩 주재 연락관공실 주임 자리에 평칭화(彭淸華.52) 부주임을 임명함.

● 이라크 공무원 한국서 인권 연수(6/5)

-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이라크 인권부 공무원 16명을 초청,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힘. 27일까지 20여일간 계속되는 ‘이라크 중앙 인권정책 발전지원’ 과정 연수는 이라크 인권부 공무원의 국제인권 안목을 높이고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라크 정부는 지난해 국가 인권실행계획 수립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본계획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 측이 지원 의사를 밝혀 연수 과정이 개설됨.

● 한·싱가포르 정상, 교류분야 확대합의(6/3)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로 실질적 교류를 확대키로 함.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회담에서 지난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금융, 의료, 녹색산업 등 여러 분야로 교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음.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발전해온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함.
- 양국 정상은 또 국제금융,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올해 열리는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리 총리는 말라카 해협에서의 안보 증진에 한국 정부가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함.



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해 문화 분야의 인적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장학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한편 이 대통령은 미얀마 정부가 민주화의 이행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화합을 이끌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는 뜻을 전달함.

● 日, 베트남 외교관 대상 연수 실시 계획(6/2)

- 일본이 베트남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임. 베트남 영문 경제주간지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R)는 최신호에서 팜자끼엠 베트남 외무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이 베트남 외교관들의 일본 연수 계획에 합의했다고 보도함.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10명 이상의 베트남 외교관들이 3주 동안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VIR은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일본은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9차 아셈 외무장관회의에 30명의 외교관들을 파견함. 현재 베트남은 호주 등에 신규 채용 외교관들을 연수 형식으로 파견해 어학과 의전 등을 습득시키게 하고 있음. VIR은 현지 일본은 영국과 호주와 외교관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로 대(對)베트남 외교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함.

● 美 국무부 군축 고문에 아인혼 임명(6/1)

- 미국 국무부는 1일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을 핵 비확산과 군축 담당 특별 고문에 임명했다고 발표함. 아인혼은 지난주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지냄. 국무부의 특별 고문은 핵심 외교정책을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회의 인사청문절차없이 임명할 수 있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아인혼이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 차관 등에게 정책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아인혼은 29년간 국무부에서 일한 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으며 북한과 이란의 핵무장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아인혼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인도와 민수용 핵연료 및 핵기술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핵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이란 등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 ‘소말리아 해적퇴치 고위급회의’ 서울 개최(6/1)

- 외교통상부는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퇴치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10일 이틀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소



말리아 해적퇴치 서울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소말리아 해적문제에 대해 이해를 함께 하는 30여개국과 10여개 국제기구 대표 80여명이 참석함. 이준규 외교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가 한국 수석대표 겸 회의 의장직을 수행함.

- 회의에서는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 동향, 민간 선박의 해적대응 모범 사례, 최근 군사작전 경험, 국제 및 지역기구의 해적퇴치 역할, 소말리아 및 인근 국가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임. 특히 이번 회의는 국토해양부가 오는 8일 '해적 방지 및 억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제3회 서울국제해사포럼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서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협조방안을 마련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외교부는 기대함.

● <한·아세안> '녹색성장' 최대 화두로(6/1)

-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말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음.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물론 양측 기업인들은 각종 회의나 회담, 토론,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앞을 다투어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써가며 21세기에 한국과 아세안이 추구해 나갈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이를 제시함.
- '녹색성장'이 핵심화두로 떠오른 데는 무엇보다도 주최국인 한국의 역할과 노력이 크게 작용함.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련 사업을 육성키로 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 소속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을 알려 한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행사 준비단계에서부터 '녹색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는 후문임.
- 이 대통령은 31일 특별정상회의 사전행사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최고경영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아세안간 3대 협력 방안으로 무역·투자, 문화·관광과 함께 녹색성장을 제시함.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녹색성장의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우리가 무궁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함.
- 이어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분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동조림, 친환경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함. 이 대통령은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녹색성장에 대한 협력을 역설하며 '녹색성장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도 이 대통령의 제안에 적극 호응함.
-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는 한·아세안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동아시아 기후 연합'과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함. 수린 피추완 아세안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이 녹색성장의 화두를 던져 아세안 각국의 환경친화적 발전 필요성이 제기된 데 감



사하다”면서 “아세안도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갖고 녹색성장에 대한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아세안 센터’를 통한 녹색성장 교류를 요청함.

- ‘CEO 서밋’에 참가한 기업인들도 이틀째 회의에서 ‘녹색성장’을 경제위기 속 아시아 기업들의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음. 정부가 특별정상회의 행사장인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 ‘녹색성장 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홍보에 나선 것도 녹색성장이 최대 화두로 부각되는 데 한 몫했다는 평가임.
- 약 181평 크기의 녹색성장전시관은 ▲수도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태양에너지 ▲물 ▲스톱CO₂ ▲바이오·풍력에너지·스마트그리드 ▲수소연료자동차 등 6개의 테마로 구성됐고 태양전지 재료인 폴리실리콘에서부터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모형에 이르기까지 녹색기술 관련 27개 품목이 전시됨. 이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녹색성장전시관을 직접 안내하며 우리의 녹색기술을 소개할 예정임.

● “中 아직은 조용히 힘 기를 때” <우젠민> (6/1)

- 중국 외교가의 원로인 우젠민(吳建民) 전 중국 외교학원 원장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외교 전략인 ‘도광양희(韜光養晦·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를 앞으로 100년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함.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1일 우 전 원장과의 특별인터뷰 기사를 통해 우 전 원장이 “중국이 발전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덩샤오핑이 남긴 도광양희, 유소작위 사상을 적어도 100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중국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인 덩샤오핑은 중국 외교의 방향으로 도광양희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푼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그의 이 발언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외교전략이 ‘전방위 대국외교’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나온 것임.
- 실제로 2003년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鳌) 포럼에서 첫 중앙당교(黨校) 부교장 출신인 정비젠(鄭必堅)이 ‘평화굴기’를 처음 거론한 이후 현 제4세대 지도부는 중국의 평화굴기를 강조해 옴. 우 전 원장은 “상당수 서양 사람들이 구소련의 대국굴기 정책을 중국에 적용하려 하고 있지만 소련의 대국굴기는 외국을 침략해 남을 괴롭히는 것이었다”면서 “중국은 절대로 이 노선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함. 그는 “사람들이 중국의 외교가 너무 유약하다면서 실력이 충분이 있으니까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고 할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곤 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도광양희는 중국이 개방하지 않겠다거나 세계와 협



력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이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중국이 발전하면서 역할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세계 역시 중국이 이렇게 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함. 우 전 원장은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周恩來) 등 중국의 전직 지도자들의 전담 통역사로 일해 왔고 주(駐)네덜란드·스위스·프랑스 대사를 지내면서 50년 가까이 외교관 생활을 한 원로 외교관임.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평생을 몸바쳐 온 외교관 생활을 회고하면서 중국의 외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음.

- 우 전 원장은 초창기 중국 외교는 생존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내세우고 투쟁하는 방식을 고수했으나 현재는 발전과 공통점,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말함. 그는 또 중국의 외교는 작은 무대에서 큰 무대로 옮겨 갔고 지도자와 외교관의 전유물이던 협의의 외교에서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광의의 외교로 변화됐고 작은 규모의 협력에서 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대규모 협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함.

● 정부, ‘新아시아 외교’ 구체화 방안 마련(6/1)

- 정부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신(新)아시아 외교’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아시아의 리더’로서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키로 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전행사로 열린 ‘CEO 서밋(최고경영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15년까지 아세안에 대한 ODA를 작년 지원 규모보다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함. 정부는 또 선진국들이 개도국 원조정책을 마련할 때 아시아 개도국들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일 “지난 1월 16일 정부가 OECD 사무총장 앞으로 DAC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내달 방한하는 DAC 실사단의 가입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DAC 고위관리회의에서 가입이 사실상 결정되고 내년 5월 DAC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OECD 원조효과 실무팀 회의는 2011년 10월 각국 정상들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회의 개최를 계기로 개도국 원조의 방향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힘.



- 정부는 또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단계에 맞춰 다양한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개발추진 우선순위와 한국의 개발지원이 일치되도록 한다는 계획임.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보다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한국의 개발 모델을 따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 뿐만아니라 교육·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모델로 삼고자 한다”고 밝혀 이들 국가와의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강조함.
- 정부는 이런 방침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하에 앞으로 5년간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함. 이어 정부는 아시아 대상국가별로 특성에 맞춘 실질적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개발을 돕고 한국의 미래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를 위해 정부는 아·태지역 주요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망을 구축하는 한편, 석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 부국들과 호혜적인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증진에 주력하고 있음. 정부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인 2일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정부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임.
- 이와 함께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 범세계적인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시 주요 이슈별로 아시아 국가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 아시아 지역의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임. 일례로 정부는 다음달 18~19일 서울에서 ‘세계경제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



[참고 1]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6/2)

(서귀포=연합뉴스) 1. 우리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간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주제 하에 2009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대한민국 제주도에 모였다.

【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

2.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2004년 발표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과 2005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동반자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신아시아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3. 우리는 한국이 1994년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과 2004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5년 체결된 한·아세안 대테러 협력 공동선언 역시 국제적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4. 우리는 한·아세안 교역 규모가 2004년 464억불에서 2008년 902억 불로 지난 5년간 두 배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간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한·아세안 투자규모가 2004년 13억 불 수준에서 2008년 68억 불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한 데 대해서도 만족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 수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연 400만 명에 달하는 것을 평가하였다.
5.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데 만족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1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고, 2009년 6월 2일 투자협정이 경제장관들간 체결되어, 한·아세안 FTA가 완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6. 우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래 최근까지 총 39백만 불 규모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제공되어 한·아세안 교역, 투자, 기술이전, 인적 교류,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 데 대해 만족하였다.
7. 우리는 한·아세안 센터가 2009년 3월 13일 공식 출범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향후 한·아세안 통상·투자 증진,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 협력기구로 활동하도록 양측 정부 차원에서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8. 우리는 한·아세안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2009년 초 한·아세안 현인그룹(EPG)이 구성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된 EPG 중간보고서에 유의하였다. 또한, 금년 말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될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 정치·안보 협력 증진 】

9. 한국은 아세안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아세안 현장이 2008년 12월 15일 발효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이 2003년 아세안 협력선언(Bali Concord II), 2004년 비엔티엔 행동계획, 2007년 세부선언,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로드맵(2009-2015)에 관한 후아힌 선언 등에 의거하여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목표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10. 우리는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 현장에 따라 아세안 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역할이 증대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증대를 위한 한국 정부기관과 아세안 사무국간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1.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역내 평화, 안전 및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 회담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12. 우리는 테러, 해적, 불법 마약밀매, 인신매매, 돈 세탁, 무기 밀매, 국제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는 사법정의와 법집행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고, 또한 국제법에 따라 해양안보 증진에 있어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 경제 및 개발 협력 강화 】

13. 우리는 한·아세안간 FTA 및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기반으로 양측간 교역규모가 2015년까지 1,500억불 규모로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상품 전시회 개최, 무역·투자 사절단의 상호 교류, 입찰·투자 정보의 교환 등 통상투자 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아세안 센터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14. 우리는 그간의 한·아세안 FTA 협정 이행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여 FTA 협정 이행과정에 긴밀히 협력하고 점검하기로 하였다.
15. 우리는 2009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CEO Summit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였다. 우



리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공동체가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한·아세안 FTA 틀 내에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우리는 국가 경제의 주요 기여자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접근하고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16. 우리는 농업이 식량 안보를 제공하고, 빈곤을 완화하며 지속가능개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농업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경험 전수와 공동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농업 인프라 분야 및 식품 저장, 가공, 유통 등 수확 후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와 관심을 독려했다.
17. 우리는 한·아세안간 물류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아세안 교통협력 양해각서가 2009년도 말까지 양측 관련 정부부처 간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하였다.
18. 우리는 한·아세안간 향후 무역·투자 및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승객 및 항공화물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항공협정에 관한 논의가 2010년 초까지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19.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빈곤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수생 초청 및 역량 형성 프로그램,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향후 7년간 7,000명의 연수생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20. 우리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에 주요한 기여를 해 온 것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아세안 역내 소지역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독려했다. 아세안은 또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실행계획에 한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백만 불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21. 우리는 세계화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근로기준, 노사관계,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 등의 분야에 있어 연수 및 전문가 교환방문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2.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의 긍정적 결실을 평가하며, 우리는 한·아세안간 ICT 지식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와 공동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ICT 인적자원개발, ICT 개발모델, 정보보안 및 디지털 융합 그리고 ICT 역효과 등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에 있어 아세안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23. 세계화로부터의 공평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아세안내 저개발 국가들에 ICT 설비와 전자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와 전자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원조에 사의를 표하였다.
24. 아세안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평가하였으며,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 특히 첨단 소재기술, 환경기술,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젊은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 및 교류를 독려하였다.
25. 아세안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아세안 고용·노동 분야 협력이 증진되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한국은 아세안 인력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내 아세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회·문화 교류 증진 】

26. 우리는 아시아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창설된 것처럼 다양한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쌍방향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2009년 5월 31일 제주도에서의 오케스트라 창설공연을 축하하였다.
27. 아세안은 한·아세안 대화관계의 틀 내에서 연간 3백만 불 규모의 협력기금을 2010년 이후 연간 5백만 불 규모로 증액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증액되는 협력기금을 청소년 및 여성 교류 프로그램, 문화적 인식 증진 등 문화·인적교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8. 우리는 교민, 여행객, 기업인, 근로자 등 양측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영사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9. 우리는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개발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간 경험공유 및 이해 증진을 위해 학생과 교사 간 교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이 아세안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한국 내 아세안학 및 아세안내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독려하였다.

【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 】

30. 우리는 기후변화, 환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침체,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신종 전염병과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1. 국제 금융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호무역을 예방하는 데에 확고한 입장을 갖기로 하였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32. 우리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금융위기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차양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CMIM의 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조속히 독자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CMIM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33. 우리는 생산적인 투자, 특히 지역 성장을 유발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발에 예금을 동원하여 역내 채권시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로드맵에 부합하는 AMBI 강화를 지지하였다.
34. 우리는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역내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청정개발메커니즘(CDM)을 개발하며, 민간원자력 활용 증가와 수력·태양광·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를 다양화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35. 우리는 최근의 식량 및 에너지 문제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범세계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역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6.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친기후 기술 도입, 협력사업 및 연구 등을 통해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훈련, 교육 및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7. 우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증진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 내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방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황폐지 복구 및 산업조림확대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의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설립 제안을 평가하였다.
38. 우리는 201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아세안 통합을 계속 지지하고, 동시에 장기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의 상호보완적이며 상생적인 역할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다. 한국은 지역 협력체 구성과정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지지하기로 하였다.

39.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이라는 주제에 부응하여 우리는 상호 정부부처를 넘어 의회, 경제계, 여타 이해관계자들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 지역 내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리고 감싸고 나누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희망이 될 젊은 세대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0.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양측 관련 정부부처들이, 필요시 국내적인 법적 절차를 마친 후, 구체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2009년 6월 2일 제주도에서 영어로 작성된 정보 2부에 서명하였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6/02/0503000000AKR2009060206690001.HTML>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